

발표 3.

## 신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기록관리 현재와 미래

주 현 우

한국중부발전 기록연구사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기록물은 수록매체의 변화 뿐만 아니라 생산의 형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은 기록물 생산 및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기록관리가 정착될 때까지 법령 혹은 규정을 통해 제도적인 부분을 강조하다보니, 서로 다른 환경임에도 동일한 기록관리 정책을 적용하게 되었고,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가장 실용적이어야 하는 기록관리가 현실과 괴리된 기록관리로 시행되는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실무자들에게 기록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얻지 못해왔다.

기록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실무자들의 협조가 없음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말하곤 한다. 이 시점에 ‘기록관리는 누구를 위하여 하는건가?’ 라는 질문을 해본다.

과거의 기록관리가 행정효율과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로 인식하고 강조되다 보니, 보존 중심의 기록관리가 행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록의 4대 속성 중 가용성(usability)을 간과하게 되었고, 정작 기록을 생산하고, 활용하여야 할 당사자들에게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반감시킨건 아닌지 반성해 본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직시해 한국중부발전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기록관리를 위해 신기술을 적용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중이며, 그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기록생산자, 기록관리자 등의 이해당사자가 기록물 전 생애주기 의사결정 과정에 인공지능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들을 선별하여,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였다. 추진방향은 법령

준수 등 기관 내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하며, 이에 따른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최소화하고, 전자기록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록연속성(Record Continuum)이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의사결정지원 기능을 살펴보면 1. 기관 내 접수된 기록의 배부 2. 생산·접수한 기록물의 분류(기록관리기준표 등 다중분류), 접근권한, 공개여부 설정지원 3. 법령, 규정, 절차서 등을 기반으로 한 챗봇 4. 개인 맞춤형 검색 및 알림 5. 군집에서 벗어난 기록물의 신규 분류체계 수립 추천 6. 구기록물의 재분류 7. 지표달성을 위한 열람율(접근권한), 정보공개율(공개여부) 관리 8. 기록물 폐기 시 보류 항목을 추출하는 로직을 기계 학습하여 향후 폐기 업무 시 보류 항목을 자동으로 추천 9. 관리대상 기록물 모니터링 및 별도대장등록 지원 등 기록관리시스템이 비정형기록물을 기계학습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은 물론, 기록생산시스템에도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단위과제카드가 업무분류 및 기록관리처리기준으로의 활용뿐만 아니라, 업무정보의 집합체(container)로 설계하고 향후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 시 업무정보(문서류 외 권한, 일정, 프로세스 등 각종 정보)의 인수인계 및 이관을 자동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우리기관의 사례에 비취보았을 때, 기록관리분야에 있어서 수요자를 위한 신기술의 도입 및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하고 싶다. 앞으로 많은 기록관리자들이 과거의 업무행태, 관행에서 벗어나 기록관리분야가 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기록관리로 나아가도록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공유하여, 한국의 기록관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